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5. 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5월 4일(화) 14:30~20: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75호 및 제106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1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06호 『안진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는 오늘 독립성 위반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위법동기에 대한 판단 및 조치 감경 고려요소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해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소명 드리고자 함. 문제가 된 대출은 위반 대상자가 사원이 되기 전인 2012년 3월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주) OOOO을 통해 최초 차입한 신용대출이며, 법인 내부 모

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2019년 12월말 기준 대출금 잔액은 약 1억 3,400만 원이었음. 해당 사원은 2018년 9월1일자로 사원으로 승진되었으며 법인의 내부정책상 사원이 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예금, 대출 등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OOOO이 저희 법인의 감사고객이 아니었던 까닭에 본 건 대출로 인한 독립성 위반 문제는 없었음. 그 이후 저희 법인은 2018년 12월31일 (주)OOOO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 해당 사원은 본 건 대출에 대하여 2019년 4월 뒤늦게 법인에 독립성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독립성 확인 대상 샘플에 해당되지 않아 즉시 파악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2월말에 진행된 2020년의 계속감사를 위한 저희들의 Conflict & Independence Check 수행과정에서 파악이 되었음. 법인은 해당 사원으로 하여금 즉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였고, 본 건 대출 경위 및 관련서류 검토 등 필요한 내부조사와 (주)OOOO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수행하고 위반사항을 확정된 이후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하였음. 본 건 대출은 해당 사원이 사원으로 승진되기 훨씬 이전인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전문직종 신용대출이며 (주)OOOO의 표준대출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정형적인 대출상품임. 금리나 대출기한 등에 있어 어떠한 특혜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킬만한 실질적인 이기적 위협도 발생하지 않았음. 외감 규정 시행세칙 별표3 독립성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법동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독립성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를 ‘과실’로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작동에 대한 7가지 판단기준을 열거하고 있음.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독립성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규정된 7가지 기준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함. 저희 법인은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들로부터 독립성 의무 준수 확인서를 징구 받고 있고 저희가 말하는 GIMS와 LIIMS라는 시스템을 통해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들의 증권계좌와 모든 상장·비상장 주식, 그리고 감사고객에 대한 채권·채무는 재무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의 직장정보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음. 배우자를 포함한 감사 참여자의 보유주식 확인은 법인의 별도 독립성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감사를 담당하는 이사가 감사업무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확인하고 있음. 또한,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연차 독립성 점검 및 연2회 내부자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위법행위가 발생한 이후 저희 법인은 해당 사원에 대해 법인 징계기준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며 유사 위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내부통제인 Self-inspection Checklist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경영진은 독립성 준수에 대한 강조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독립성 점검결과와 위반사항에 대해 임직원 공유 및 정기 독립성 교육 외에도 승진자와 신규 입사자에 대한 추가 별도 독립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번 사항은 사원의 독립성 규정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출발한 건으로 생각됨. 물론 저희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완벽하였다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조치양정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함. 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기에 자체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하고 시정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해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본 건 대출 인지 후 바로 법률검토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내부조사에 착수하였으며 OOOOO 및 (주)OOOO과 동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음. 내부조사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사원과의 면담, 서류검토, 대출조건 등 세부사항 파악과 외부 법률검토 등 필요한 내부조사를 수행했음. 본 건 대출을 최초 인지한 2019년 12월27일부터 2020년 2월6일 자진신고까지 일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초 인지한 시점이 연말이었고 외부 법률검토 및 (주)OOOO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신속히 신고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는 결코 자진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감독기관에 대한 자진신고를 전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 법무법인 선임과 고객인 (주)OOOO에 고지는 필연적으로 본 건의 대외적인 노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임. 즉, 저희가 처음부터 은폐가 아닌 자진신고를 전제로 내부절차를 진행한 것임. 조치양정기준상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의 취지는 회계법인들이 발견한 내용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대출과 관련된 최초의 독립성 위반사례로서 감독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고객사에 대한 고지 및 범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행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독립성 위반이 발생한 경우 수시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수시보고 사유 발생일을 법인의 내부조사 결과 외감법 또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날로 아니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던 주식거래와 관련된 독립성 위반 사건 이후 저희는 지속적으로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성 관련 인원을 충원하는 등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번 대출 건을 적발하게 된 것 역시 저희 법인만 갖추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채권·채무신고시스템을 통한 것으로 독립성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함. 물론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나 2,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저희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진신고한 건에 대해 이를 양정에 고려해 주신다면 향후 다른 회계법인들에게도 위법사항 자진해소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안진회계법인 독립성 부서가 본 건 신용대출을 인지했다고 했는데 인지 과정,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000 사원은 2019년 4월에 저희 내부시스템에 본인이 (주)0000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신고를 했음. 그런데 그 즉시 저희 독립성 부서가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저희 독립성 부서는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 2019년 12월에 (주)0000의 2020년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 저희 내부 Conflict & Independence Check를 하기 위하여 신고된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원인 000이 (주)0000에 대출을 가지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위원) 000 사원은 나름 신속하게 신고를 했는데 안진회계법인 차원에서 매우 늦게 알게 된 것인지?
- ▶ (진술인) 000 사원이 (주)0000에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자동적으로 알람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 그러다 보니 신고한 상태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독립성 부서가 매뉴얼로 그 시스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임.
-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기에 자진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인지를 하게 됐는지, 자진신고하면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닌지?
- ▶ (진술인)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과거에는 2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했음. 정기적인 독립성 점검(inspection)을 통해서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감사계약이 수입되거나 또는 기존 감사계약이 재연장되면 저희가 신고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음.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인력부족으로 신고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전담직원이 없어 제때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 즉시 확인하고 있음.

- (위원) 2019년 12월27일에 본 건 신용대출을 인지하신 이후에 내부조사, 서류검토를 하고 외부 법률검토도 진행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외부 법률검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진술인) 저희가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동 건 위반사항이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것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될 사유인지 등등을 외부 법률검토를 의뢰했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OOOO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었음.

- (위원) 법률의견서에는 감사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했는지?

▶ (진술인) 법무법인 OO OOO 변호사임. 저희한테 법령위반 사실과 후속조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저희가 감사계약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한 검토였음. 채무·채권 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검증 업무를 행했기 때문에 제33조제1항 위반사유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음.

- (위원)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채권·채무 관련된 것은 기존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적발될 수 없는 시스템이 아니었는가,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저희가 채권·채무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른 회계법인들의 현황도 파악을 했음. 그런데 회계법인 중에 채권·채무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한 곳도 없었음. 개인정보 같은 것이 많아서 모든 채권·채무를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내부의견이 있어서 감사고객에 대한 채권·채무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서 최근에는 사원의 경우에는 모든 채권·채무를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채권·채무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저희 밖에 없음.
- (위원)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에 나와 있는 직무제한 관련된 것이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림.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규제산업이어서 회계법인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계열사, 자회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client)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고객(client)의 감사인으로 선정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정치(精緻)한 사전

적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매우 중요한 고객(client)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더 준비를 철저히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을 감사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채무를 회수하도록 독립성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된 사원 또는 감사팀이 그러한 채권·채무나 주식 재무적 이해관계를 모두 해소했는지를 사후적으로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많은 시스템 개선과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모든 사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체 시스템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감사고객이 저희의 고객이 되더라도 사전에 즉시 그러한 독립성 위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야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OO금융 거래 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공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나 O회계사님께서도 왜 전체 임직원들에 대해서 이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으셨는지?
- ▶ (진술인)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주) OOOO의 우선협상자가 되고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기간까지 한 2주 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2주 동안 저희 법인의 상당수 회사들의 감사업무 수임을 위한 내부 체크, 독립성이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다 확인(check)하다 보니

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못한 측면이
있음. 그 부분은 1월초에 했음.

○ (위원) 금감원, 1월14일에 발송한 것이 맞는지?

- (보고자) 1월14일에 사후적으로 발송한 것은 맞음. 사실 이
독립성 확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
위여야 하는데 감사체결일인 12월31일까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발송'이라고 적은 것임.

○ (위원) 안진회계법인에서도 '해당 사원의 독립성 규정에 대
한 인지부족'이라고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독
립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법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매년 독립성 교육은 전
임직원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독립성 교육
내용에는 이러한 공인회계사법 내용이 다 있었습시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해당 사원이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본인이 감사팀이 아니면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쉽게 하고 있음.

○ (위원) OOO씨가 독립성 부서에 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상
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였음. 그런데 독립성 담당직원은 "(주)
OOOO의 감사팀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답변
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진술인) 그 부분은 000 사원께서 독립성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음. 12월말에 했을 때는 본인이 (주) 0000에 대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환해야 되느냐는 간단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독립성 담당직원이 사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직원이 문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감사팀이 아니면 괜찮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음. 아마 본인이 사원인 회계사라고 얘기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착각을 해서 부정확한 답변을 했던 것 같음.

○ (위원) 이번 안진회계법인의 사례를 ‘중과실’로 보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사전위반, 그 말은 000씨가 9월에 신고를 할 때 (주)0000에 대출금이 있다는 신고를 누락했음.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사전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기점검을 언제 하는지?

▶ (진술인) 매년 하고 있음.

○ (위원) 정기점검 때 신고 되어 있었는데 미조치했다는 것인지? 000이라는 사람이 4월에 신고를 했는데, 정기점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 (진술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사원이 되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함. 그 이후에는 사원수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이분이 2018년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표본추출(sampling)의 샘플로 안 뽑혔

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은 것임.

- (위원) 사전위반과 정기점검 신고가 되었으나 미조치되었다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중과실로 보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이는데,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주식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들을 시스템에 신고하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함.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규 고객(client)이었고, 그리고 이 고객(client)과 신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독립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점검(check)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한 바가 없다는 것임. 일상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했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계약의 수임이라는 것은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계약 체결 전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인 점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음.

- (위원) 2018년 9월1일에 000씨가 승진하면서 (주)0000의 채무를 신고 했으면 시스템에서 예방이 되었음.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으나 개인의 일탈이 있었던 것임. 시스템이 아주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임.

- (보고자) 지금 안진회계법인에서 채권·채무를 신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기존 계약이 체결된 고객(client)에 대해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임. 그래서 사원이 될 때 모든 채권·채무관

계를 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객(client)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 ▶ (진술인)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원에게는 우리가 OO감사를 수임한다고 공지가 되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사원은 전부 다 본인의 채권·채무를 신고해야 되었는데 이분이 신고 안 한 것은 확실히 그분이 잘못된 것이 맞음.
- (위원) (주)OOOO이 12월31일에 신규 계약으로 들어올 때 사원들이 채권·채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process)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 ▶ (진술인) (주)OOOO 감사계약은 2018년 12월31일에 체결되었음. 방금 금감원 말씀하신 대로 감사계약 체결 전에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라는 메일은 발송하지 못했고 그것은 2019년 1월14일에 발송되었습시다만 2018년 12월14일에 전 사원에게 (주)OOOO의 우선협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공지한 바가 있음.
- (위원) ‘중과실’일 경우 감경 조항이 있는데 안진회계법인의 진술서를 보면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즉시 소관기관에 자진신고한 것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음. 이 부분은 ‘즉시’라는 관점에서 조금 기간이 있다는 얘기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저희가 봤을 때 약 1달 반 가까이 지체된 것을 즉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음. 물론 안진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점검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채권·채무 또는 주식 보유로 인한 독립성 위반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단순명료함. 고객 회사에 대해서 채권·채무가 있다, 이 사실만 있으면 일단 법적으로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움. 과거 2016년에도 안진회계법인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3일 만에 신고를 했었음.

▶ (진술인) 저희가 2016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금감원에 즉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본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이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채권을 해소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이 외감법 위반 또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는지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음.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이 2019년 12월말. 즉, 기말감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음. 그래서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OOOO은 신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지, 과연 이것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

니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임. 신고서 초안 같은 것도 저희 외부 법무법인에게 초안을 의뢰했었고 그래서 금감원에 조금 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음.

○ (위원) 이 규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즉시'에 대한 해석의 이슈(issue)도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법상 독립성 위반 같은 경우에는 감사계약의 해지 사유가 됨.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데 이것을 감사인이 어떤 사유로든 해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시간을 끌고 누락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발생했으면 일단 즉시 신고하고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15시26분 정회)

(15시33분 속개)

○ (위원장) 제106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첫째, 안진회계법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 독립성 점검 과정을 일부 수행하지 않아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였음. 그러나 사후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독립성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고, 시정조치 후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진회계법인의 독립성 관련 내부통

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동 재무적 이해관계는 금융기관과의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한 신용대출로, 채무자가 동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아 독립성 위반 사항이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3) 조치양정기준 감경사유상 ‘감사인 자체 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단계 추가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둘째, 경미한 독립성 위반 사안임에도, 피감사인에게 감사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감사법 위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감사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과거 증선위는 공인회계사의 주식보유에 따른 독립성 위반 조치 결정시(‘16.3.29.) 경미한 위반인 경우 감사인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음. 동 사안의 경우에도 기존의 증선위 결정을 준용하여 회사와 안진회계법인이 2021년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셋째, 독립성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인 변경 및 지정 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기 보다는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금감원은 독립성 위반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증선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75호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회계기준원 그리고 금일 있을 증선위 결정을 존중하겠음. 다만, 회사에서는 당시에 합리적인 회계처리라고 판단을 했고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로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음. 그러한 것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사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보거나 위법한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고 투자자나 재무정보 이용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없는 사안임. 본 건에 대해 위반 동기를 ‘과실’이나 ‘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상에 면제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사유 부분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본 건의 경우에는 7건의 위

반사항에 대해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산정이 되고
곱하기 7이 되어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이 되었는
데 본 건에 있어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상 감경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
사의 경우에도 당사와 동일하게 당시에 회계처리를 한 사
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회의 때 보고 드렸
던 내용이나 금일 말씀드린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
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이연상각 방식으로 처리했던 회계처리를 지금은 다
일시비용처리 방식으로 수정하셨는지?

▶ (진술인) 아직 일시비용처리로 변경하지는 않았고 위원회
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만약 이연상각 방식에서 일시
비용 방식으로 수정한다면 투자자들에 피해가 없을지?

▶ (진술인) 투자자들에 경제적인 피해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 그렇게 하면 기간 중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투자자들에 왜 영향이 없는지?

▶ (진술인) 수익률이 하락하는 부분은 있는데 수익률 하락

외에는 특별히 투자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임.

○ (위원) 비율만 하락하지, 실제 재산의 절대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맞음. 회계적인 수치만 변동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서 산출되는 수익률이 변동되는 것이지, 현금 기준에서 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됨.

○ (위원) 그러니까 미리 펀드환매를 신청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연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비용을 적게 뺐았으니까 수익률이 높았을 것이 아닌지? 그 높은 수익을 환매를 해서 미리 빼가고 일부 투자자들은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면 방식을 변경시키면 남아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생길 텐데 그럴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본 펀드들은 전부 다 환매금지형 펀드로 환매가 불가능함. 투자자에 변동이 없음.

○ (위원) 그러니까 투자자에 변동이 없고 폐쇄형펀드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보다는 적어지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진술인이 퇴장함.

(15시50분 정회)

(16시14분 속개)

- (위원장) 제75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음.
금감원은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이 총 7개의 펀드를 설정하면서 펀드에서 지급한 총액인수수료를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하여 펀드 존속기간 동안 이연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의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 대해 총 1억 3,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건의하였음.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선위·금융위에서 정하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에 의거 동 제·개정 권한을 회계기준원에 위탁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봤을 때 동 건 당시에는 총액인수수료와 관련한 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해석은 없었으며, 최근 증선위('21.4.7일) 지시에 따라 회계기준원에 공식질의를 하였음.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규정상 총액인수수료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즉, 당시에는 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해석이 없었으므로 동 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금감원의 감독행정작용 또는 행정지도는 감독당국의 지침으로서 사실상의 효력은 인정되나,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해서 법률상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는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당시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에는 총액인수수료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총액인수수료의 즉시 비용처리가 완전하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된 7개 펀드는 설정일 이후 투자자 변동이 없었으므로 해당 행위가 투자자 간 손익에 미친 영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이 총액인수수료를 이연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7)을 적용하여 조치대상 7개 펀드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를 금융위 최종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즉시 비용처리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과 같이 총액인수수료를 이연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온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본 건 조치안의 금융위 최종의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즉시 비용처리로 변경토록 하되, 개별 펀드별로 동 회계처리 변경이 투자자 손익과 연관이 있는 등 투자자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금감원에 별도 보고한 후 그 처리방안을 증선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본 건 조치안의 논의과정에서 언급된 2017년 7월 금감원의 감독행정작용에 포함된 ‘대출취급수수료’ 및 ‘펀드 판매행위와 연관된 자문수수료’의 적정한 회계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동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공식 질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아 이를 증선위에 보고한 후 자산운용업계에 재안내함으로써,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업계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07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찬성함. '①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신설(안 별표2 제4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인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 건이 올라왔을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정밀하게 정리를 잘 하셨음. '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2 제2호, 제4호)'를 하게 되면 기존의 과징금 부과 수위보다 과징금이 상당히 현실화 되는지?
- (보고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대책에서 방안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법개정 사항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진행중이고, 오늘 하는 것은 일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되려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따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음.
- (위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신설은 아주 시기적절한 것 같음.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하듯이 집합투자증권

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음. 일단, 0.5%, 0.4%에 대한 기준이 모집금액인지?

- (보고자) 여기 감안 사유가 없고 위반행위 중요도가 '중'인 가운데에 있는 0.3%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중하면 퍼센트를 좀 더 높이고 낮추는 것인데 여기에서 0.3%는 자산운용사의 최근 5년간의 평균 보수율로 한 것임. 그 이유는 모집금액의 보수율만큼 한 것이 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봐서 과징금이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0.3%를 가운데 넣은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는 것은 퍼센트를 떨어뜨리고 중한 것은 조금 더 높이고 그렇게 표를 짰다고 보시면 됨.
-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퍼센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모수가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증권도 채권형, 주식형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대체투자형인 부동산형 펀드의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클 텐데 거기도 동일하게 모집금액의 0.3%라면 부동산형은 엄청난 금액이 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펀드 AUM 자체가 유형별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0.3%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임. 대체투자형인 부동산형의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클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전반적인 모집금액의 운용보수율을 산정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형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날 것

이라는 생각을 함.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림. 두 번째 질문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2 제4호를 보면 계량적 위반사항을 'A', 'B', 'C', 'D'로 구분하였음. 그런데 'D'의 경우 기존에 '하'가 '40%미만', '중'이 '40% 이상 160% 미만'이고, '상'은 '160%'인데 바뀐 규정에 의하면 '하'가 '60% 미만', '중'이 '60% 이상'이고 '상'은 없음. 'D' 유형의 경우 '상'은 제외하는 것인지?

- (보고자) 현재 이 중요도 기준은 외감법 시행 세칙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 것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성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요도가 'D'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데 외감법 시행 세칙과 동일하게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D'에서는 '상'부분을 없애고 '중', '하'만 운용하고자 해서 '상'부분에 대한 수치는 없애고 '중', '하'에 대한 수치만 남겨 놓은 상황임.

○ (위원) 외감법 시행 세칙의 'D' 유형의 경우에는 아예 '상'을 빼 버린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2 제2호, 제4호)'와 '㉕ 정기보고서 공시규제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안 별표3 제3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정기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제출 여부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저희가 항상 불공정조사를 하면서 제재되던데 혹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을 우리가 적발(detection)하는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요건이 해당되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으면 대량보유 보고의무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인데,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나 회계위반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바꾸면 과징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는 외감법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분식회계라는 행위가 있으면 외감법상 과징금이 부과되고 또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큰 것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외감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도 부과되고 외감법상 과징금도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외감법상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과된 과징금의 양을 고려해서 외감법상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두 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부과 받은 과징금의 액수를 고려해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참여자) ‘[4] 기타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를 보면 신규로 감면 근거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문구를 보고 싶어서 별표를 살펴봤더니 ‘과징금 부과기준’이라고 2021년 4월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된 것이 있는데, 16페이지의 ‘5. 과징금의 감면’

을 보면 제가 사이트에서 본 기준상으로는 (4)에 이와 비슷한 규정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보고자) 두 조문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조문이 있는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 받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금융위가 어떤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 있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문은 그대로 두면서 금융위에서 조치한 것도 감면하는 것을 새로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 항으로 신설한 것으로 이해를 했음.

○ (참여자) 그 앞의 ‘기타 다른 행정기관’에 금융위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지?

- (보고자) 그러함.

○ (참여자)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문구를 해 놓으셨는데 보통은 ‘감면한다.’고 문구를 기재함.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에 혹시 이런 식으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해석에 분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보고자) 동일 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받은 경우 감면 근거 마련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문구임.

이미 해당 검사제재 규정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가는 것이 일관된 제재를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음. 펀드 유형별로 부과비율을 설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음.

- (위원장) 제107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님 지적하신 펀드 유형별로 과징금 부과 비율이, 그러니까 펀드 규모가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0.3%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으로 보임. 그래서 과징금 부과비율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부분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지금 현재로 가든지 아니면 펀드 유형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조정하든지 비상임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기 바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48분 정회)

(17시05분 속개)

- ☐ 의결안건 제108호 『성지건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성지건설(주)은 1969년 2월에 설립되어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임. 저희 회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2010년도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음.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2011년부터 많은 임직원이 퇴사하였고 특히 이 사건 회계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인 회계팀과 영업팀은 9명 중 5명, 23명 중 16명이 퇴사를 하였음. 2010년 회생신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인력의 퇴사, 거기에 신규 직원들의 미숙함, 이것이 바로 이 사건 회계오류의 주된 원인임. 그 외에 다른 원인은 없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회계오류가 발생된 때는 2011년부터 2015년임. 현재 성지건설(주)의 경영진은 2016년부터 경영을 맡고 있고 이 사건과 아예 무관함. 이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에 발생한 그야말로 오래 전의 일임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해 귀 원의 감리를 받았고 그 결과 뜻밖에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이것이 ‘중과실 V 단계’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사전조치통보를 받았음. 저희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을 받을 위험에 처했음. 적자경영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저희 성지건설(주)에게는 이는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임.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를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 저희 회사는 과거의 손실을 현경영진의 자본금 잠식으로 눈가림하라는 외부감사인의 부당한 조언을 거부했고 스스로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고, 귀 원에게 이 사건 감리절차에 정말 성실히 협조하였음. 제출

을 명하신 자료는 거짓 없이 모두 제출하였고 소명도 할 수 있는데 까지 모두 했음. 저희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지 않았고 이미 발생한 회계오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주가를 올리지 않았고 민간공사를 신규 수주하지도 않았음. 또한, 이 사건 회계오류로 인하여 그 어떤 제3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한편, 귀 원의 감경조치는 그 사유마다 각각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저희는 자진 신고하여 감경조치를 받았지만 저희에게 자진신고 말고도 다른 추가 감경 사유가 많이 있음. 저희가 귀 원으로부터 사전조치통보를 받을 때 추가 감경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음. 부디, 이 사건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시고 저희 회사가 적자경영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저희 회사에게 추가감경 조치를 적용해 주시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을 면해 주시기 바람. 성지건설(주)은 2016년 회계감사에서 이 사건 회계오류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수정·공시하였음. 저희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재발이 없도록 현재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내부통제 및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 부디,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결과, 현재 회사의 힘겨운 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사에게 관대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람.

- (위원) 지금 ‘중과실 III단계’에서 2단계 감경이 되어 ‘중과실 V 단계’가 되었는데, 추가로 1단계 더 감경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으로 추가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진술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기본조치 감경사유에 보면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건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성지건설(주)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한 바가 없고 제3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것도 없음. 그리고 방법의 측면으로 보면 적극적인 행위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소극적 부작위, 그러니까 불법성이 떨어진 방법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 금감원은 진술인의 답변에 대해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저희가 기존에 정상참작을 적용하여 감경해 준 사유와는 차이가 있음. 대부분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 성지건설(주)은 명확한 근거 없이 조사 때부터 계속 정상참작 내지는 감사인 지정을 회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진술하신 내용으로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 (진술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항 이외에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호에 따르면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그리고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

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귀 원의 조치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유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회사가 2020년말 기준으로 10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이 부분은 과징금도 아니고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9호 『삼성엔지니어링(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29호 『○○○○ ○ ○○○ ○○○ ○○에 대한 ○○○○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이 내

용을 설명함.

○ (위원) 외감 대상 신규편입 회사가 매년 5천사 이상 생기고 있어 감사인 미선임 회사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0년, 2019년, 2018년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매년 5천사 이상이 생기고 5천사 이상이 나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input·output)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아웃풋(output)은 줄어들고 있고, 인풋(input)은 거의 매년 5천사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위원) 감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직권 지정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감사인을 미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지?

- (보고자) 대부분의 회사가 소규모기업이어서 회계인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저희가 감사인 체결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체결을 못한다고 읊소하는 회사임.

○ (위원) 감사인 미선임으로 지정된 회사가 2019년에 66개이고 2020년에 22개인데 이 66개, 22개의 계속감사와 최초감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는

없는 것인지?

- (보고자) 대략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는 없음.

○ (위원) 저는 이 처리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단지, 계속감사의 경우, 특히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가 계약기간 내 감사계약을 체결 안 한 경우가 금융회사는 없을 듯한데, 어떠한지?

- (보고자)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 미선임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위원)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이나 코넥스 이런 곳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듯한데, 그러한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10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진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8년 1월경에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아직 생성되기 이전임. 진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경 사이에 F씨로부터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유망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임. 이 기업이 1년차 회계연도부터 3년차 회계연도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4년차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2017년부터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비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임. 그 근거는 이미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2017년 분기별 재무제표를 볼 때 수익구조와 재무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임.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시작할 때는 아직 (주) □□□□□가 어느 회사에 인수될지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진술인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음.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점은 진술인은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업 투자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임. 당시에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업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이미 공시되었던 2017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익구조가 직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얘기를 F으로 부터 듣고 2018년 3월에 공식적으로 2017년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면 턴어라운드(Turnaround) 종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임. 그리고 진술인은 여러 날에 걸쳐서 안분투자를 하고 특히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불과 이틀 전에 8만주 가까이 매도하기도 하였음. 당시 이렇게 매도한 것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그런데 매도하고 네이버 주식토론방의 분위

기를 보니 오히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매수한 것임. 만약 진술인이 F로 부터 미공개정보를 공유받았다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 것임. 진술인은 2018년 3월경에 예상한 대로 감사보고서에서 흑자 전환된 것을 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음. 그다음으로 G씨에게 이 사건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것도 없거니와 (주)□□□□□에 대한 언급조차 한 적이 없음. 진술인은 미공개정보는 물론 (주)□□□□□가 유망하다는 취지의 얘기조차 한 적이 없음. 진술인에게 진정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가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림.

- ▶ (진술인) D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기는 하지만 제가 (주)□□□□□(舊 (주)♀♀♀♀♀♀)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그리고 미공개정보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 시점부터 주식을 사고팔고, 본인이 차트에 따라서 주식을 거래했던 사람임. 진술서에서도 제시한 주식 매매패턴처럼 D씨는 그 주식을 사고팔고 있었고 오히려 정보가 공개된 후에 주식을 더 샀었고 사실은 공개 후 주식을 더 많이 샀었음. 다른 거래처 술자리에 갔다가 술자리에 있는 거래처 담당자가 주식 얘기를 하다가 추천을 받아 샀다고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 들었음.
- (위원) B씨가 주식 매수한 것이 2018년 1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0~11일에 매수한 것이 문제되는 것임. 그러니까 1월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4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4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4월에 매수·매도를 한 것은 주식이 오전에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불안해서 다시 팔았던 것이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임. 그렇게 제가 흥분도 하고 불안해서 매도를 했음.
- (위원) G씨 사무실에서도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업무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 ▶ (진술인) G씨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컴퓨터도 보고 업무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었음.
- (위원) C씨께서는 ▲▲▲▲(주)이 (주)□□□□□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E이라는분을 아시는지?
- ▶ (진술인) 알고 있음.
- (위원) E씨 얘기로는 ▲▲▲▲(주)에 (주)□□□□□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업무에 대해서 C씨에게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음. 맞는지?
- ▶ (진술인) 공유한 사실이 없음. E씨가 그 당시 사주로서 M&A 관련된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만약 ▲▲▲▲(주)과의 일을 알았다면 4월10일 발표 시점의 불과 하루 이틀

전이였지 않았을까 싶음.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주)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투자를 결정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 (위원) C씨께서는 지난번 자조심 때도 오셔서 “실질사주 E씨는 (주)△△△△ 대표인데 대표가 사주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대한 경영사항은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럴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M&A와 관련한 공동투자자 유치 정보를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맞음. 그런데 그 정보를 D씨에게 전달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전달한 적이 없음.

- (위원) 금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주식 거래를 위해서 D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 (진술인) 그것은 인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단차 반환하는 것 다 인정했고 그때는 제가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조심과 증선위에 나오지도 않았음.

- (위원) 대표로서 사주가 알고 있는 정보를, 관련되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100%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90% 알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 거

기에 D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특히 (주)△△△△ 주식을 차명으로 사용한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계심.

- ▶ (진술인) 차명거래는 이 (주)□□□□□□ 주식거래로부터 1년 정도 후에 있었던 일임. 차명거래를 한 시점은 2018년 9월, 10월 정도였을 것임. 이에 대해 충분히 다 인정을 했고 회사에 단차 반환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임. 시점이 다른 데 그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차명으로 거래했을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11호 『(주)티시스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112호 『(주)필로시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티시스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하였고,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제출의무 위반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후속적 위반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동 회사의 경우 모집 행위가 없었으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됨.

○ (위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어떤 것인지?

- (보고자)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임.

○ (위원) (주)필로시스가 과징금이 좀 많은 이유가 600만 원짜리가 2건 있고 1,500만 원 짜리가 3건 있음. 이 1,500만 원이 '최종 위반 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음. 10페이지에 과징금 5,700만 원이 나온 과징금 산정내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최종 위반 시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세번째 '③ 주요사항보고서('18.4.23. 전환사채권 발행)제출의무 위반'을 최종위반으로 보면 2년 이내 ①~③번까지 3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회부터 1,500만 원으로 되는 것임. 또 다음으로 '④ 주요사항보고서('18.10.16. 전환사채권 발행)제출의무 위반'을 최종위반으로 보면 ②~④가 2년 이내에서 3회가 되기 때문에 계속 1,500만 원씩 최고금액으로 부과하게 된 것임.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1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인데 이에 대해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지?

- (보고자)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조문은 보다 잘 정비되어 만들어져 있음. 7페이지를 보시면 ‘③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충실하게 설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충실’이라는 것도 불확정 개념이기는 한데 그래도 ‘높은 수준’, ‘낮은 수준’보다는 판단의 여지가 있음.

○ (위원) 통상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면 누가 될 수 있는지?

- (보고자) 아마 사건·사고를 낸 사람의 윗사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14호 『미래에셋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미래에셋증권(주)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나가면 4개사가 되는 것인지?

- (보고자)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이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아 영위 중에 있음. 미래에셋증권(주)이 인가가 되면 총 4개사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게 됨.

- (위원) 현재 3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보고자) 작년 말 현재로 15조 6,000억 원 정도 조달된 것으로 나와 있음. 참고로 작년에 3사들이 발행어음을 통해서 2,4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위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①중소·벤처기업 등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23년까지 5%)하고, ②계열사 공동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③부동산 투자 비중은 제한(10%내외 운용, 최대한도20%)하겠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이라고 되어 있음. 이것이 이번 인가에 대한 부과는 아닌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주) 쪽에서 스스로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이는데, 맞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기존에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단기금융업을 허용해 준 취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기업금융 공급인데, 부동산 운용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주) 인가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20시53분 폐회)